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선 5기 자치단체장 당선자의 공약이행가능성을 통해서 본 전망과 과제

일시 : 2010년 9월 7일(화) 14시

장소 : 대전시청 세미나실

주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행순서

식순	시간	담당	비고
개회	14:00~14:01	사회자(장수찬 /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대표 인사	14:01~14:05	이상덕(대전연대 상임대표) 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주제발제	14:05~14:30	민선 5기 대전시의 주요 시정운영방향 및 정책 (문경원 /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실장)	
토론	14:30~15:30	지방재정(금홍섭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도시 및 교통(박정현 / 대전광역시의원) 복지(문창기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여성(임정규 / 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처장) 환경(양홍모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문화(조지영 / 대전문화연대 팀장)	
종합토론	15:30~16:00		
폐회	16:00~16:05		

간지

주제 발제 문(PPT)

간지

지방재정 위기 측면에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핵심공약 평가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국회예산처 분석자료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2008년 ~ 2012년까지 5년동안 세재개편에 따른 지방세는 -18조6천억 감소예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 액	1조 4천억	4조 7천억	3조 8천억	4조 4천억	4조 3천억

* 2009년 지방재정 감소액 총 7조원(국회 예산처)

. 감세영향(4조 7천억), 경기침체 영향(1조 9천억), 지방세 비과세 영향(4천억)

*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육채 발행 불가피

. 전국 2조1천억원(충남 1,252억, 대전 673억)

* 종합부동산세수 감소(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평균 100억씩 배부)

. 취득세 감소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100% 지방재정으로 활용

. 동구 / 111억(2008년) 94억(2009년) 45억원(2010년) 매년 감소

- 과거 정권별 지방교부금 추이

구 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방교부금 증가추이	58.4%	92.6%	115.1%	-8.2%

*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지방채 잔액 현황 / 2009년말 26조원으로 08년말에 비해 6조원 증가(33%)

- 지방통합재정수지 현황

총 계	2008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2009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27조원	20조 흑자	-7조 적자

-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2010년 100조에 이를 전망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 액	38조 2천억	53조 1천억	66조 5천억	83조 4천억	100조 전망

* 대전도시 개발공사 07년 0원이던 부채가 2010년 2월 2,765억원으로 급증

2) 5개구청 지방재정 위기 실태

- 5개구청 회계별 본예산 규모 및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억원)

시도별	10본예산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0재정 자립도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합계(A+B)	37,884	30,409	28,575	6.4	7,475	6,733	11.0	43.5
시 본청(A)	26,853	20,171	19,200	5.1	6,682	5,954	12.2	54.7
소계(B)	11,031	10,238	9,275	9.2	793	779	1.8	21.4
동 구	2,303	2,170	2,042	6.3	133	123	8.1	12.2
중 구	2,079	1,919	1,729	11.0	160	143	11.9	18.4
서 구	2,603	2,511	2,291	9.6	92	110	△16.4	22.4
유성구	2,208	1,838	1,700	8.1	370	375	△1.3	32.8
대덕구	1,838	1,800	1,613	11.6	38	28	35.7	18.6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득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 대전광역시 5개구청 재원부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1,232,190	265,787	223,683	294,928	219,686	228,106
예산규모	1,090,054	233,300	191,868	266,847	192,750	205,289
재원 부족액	142,136	32,487	31,815	28,081	26,936	22,817
인건비	40,390	10,489	4,428	8,418	8,100	8,955
국비보조사업	42,803	12,131	9,817	6,222	8,562	6,071
기타경비	45,253	7,467	13,755	11,842	7,212	4,977
세입결함분	13,690	2,400	3,815	1,599	3,062	2,814

* 기타경비 내역 / 청소대행비, 기금전용, 쓰레기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비용, 전기요금 등

- 대전동구청사 신청사 건립중단 사태

. 대전동구청사 현재 47% 공사진행된후 공사중단

. 707억의 총 공사비 가운데 360억원 조달못해 공사중단

. 현재 동구청 일반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75% 밖에 편성안되어 있음

. 동구 미확보 예산, 32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가 넘는 규모

- 5개구청 재정결함금액 1,421억원(전체예산의 13%)

구 분	동구청	중구청	서구청	유성구청	대덕구청
금 액	325억	318억	280억	269억	228억

* 국비, 시비 보조사업도 중단하고 사회복지 구비부담도 못할 상황

- 지난 7월 동구청을 비롯해 5개구청 대전시에 재정지원 요청

- 동구청 200억, 중구 200억, 서구 200억, 대덕구 150억, 유성구 100억
- 대전시 지원만이 살길인 구청들이지만 대전시 거부
- 대전시 재정여건도 녹록치 않은 현실

2. 옹호철 대전시장 핵심공약 사업비 현황

1) 옹호철 시장 약속사업 년도별 소요사업비 내역

분야별	사 업 건 수			소 요 사 업 비(단위 / 억원)					
	계	임기 내 사업	임기 후 사업	계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시 비	기 타	2010 ~14년	2015년 이후
계	54	34	20	97,489	42,679	44,361	10,449	60,835	36,654
교육지원	4	4		5,131	1,523	2,829	779	5,131	0
시민행정	2	2		90	0	89	1	90	0
경제과학	12	7	5	16,255	5,503	5,058	5,694	11,198	5,057
문화관광	9	4	5	8,652	3,015	3,928	1,709	4,495	4,157
복 지	12	10	2	2,450	265	2,075	110	2,221	229
환경녹지	4	1	3	7,336	3,926	2,026	1,384	6,854	482
교통건설	7	5	2	36,073	21,695	13,606	772	16,198	19,875
도시개발	4	1	3	21,502	6,752	14,750	0	14,648	6,854

- 염시장은 총 54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7,489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음
 - + 참고로 민선4기의 경우 총78개 공약사업에 9조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음
- 54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1,805억원이 소요(민선4기의 경우 평균 1,174억 소요)
- 교통,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 경제과학분야 외면
 - + 민선 4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경제과학>교통>도시분야 순으로 투입했으나
 - + 반면, 민선 5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교통>도시>경제과학 분야 순으로 투입
- 재원별로 살펴보면 민선4기는 62.6%를 민선5기는 43.8%를 국비로 충당계획을 세움
 - +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과도한 자체예산 조달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의심됨
 - + 실제로 민선5기 시비부담은 4조 4,361억이지만, 민선 4기때는 1조 1,324억에 불과했음
 - +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됨
- 이외에도 과학도시에 걸맞는 목표설정 및 세무추진공약 미흡
- 도시 균형발전 등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지않음

2) 민선5기 공약 사업의 대형화

계	비 예 산	50억원 이 하	51 ~ 100억원	101 ~ 500억원	501 ~ 1,000억원	1,000억원 이 상
54개	3개	11개	3개	17개	4개	16개

- 민선5기 공약사업가운데 500억 이상 소요 사업비 갯수가 총 20개로 37%에 이룸
(참고로 민선 4기의 경우 15개로 총 78개 사업 가운데 19.2%에 불과했음)
- 특히, 민선 4기의 경우 비예산을 포함 50억 이하 사업이 총 40개(51.3%)로 총사업의 절반
(민선 5기의 경우 50억이하 사업은 14개로 20%에 불과함)

3) 10대중점 관리 약속사업비

연번	사 업 명	추진기간	사 업 비				사업 구분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10개 사업		40,739	22,864	17,262	613	
1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10 ~'14	4,743	2,963	1,515	265	임기 내 사업
2	첨단 의료관광도시 육성	'10 ~'15이후	313	50	143	120	임기 후 계속
3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10 ~'15	5	-	5 (용역비)	-	"
4	중앙로 재창조 사업	'10 ~'15이후	378	60	318	-	"
5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0 ~'15이후	30,000	18,000	12,000	-	"
6	대전 푸드 & 와인 페스티벌	'10 ~'14	45	-	45	-	임기 내 사업
7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	'10 ~'15이후	2,500	1,000	1,500	-	임기 후 계속
8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	'10 ~'14	42	-	42	-	임기 내 사업
9	영유아보육의무교육수준 확대 지원	'10 ~'14	687	-	687	-	"
10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10 ~'14	2,026	791	1,007	228	"

- 10대중점 관리 약속사업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건설비만도 3조원을 예상하고 있음
- + 염시장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3조원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지하철 건설비와 건설 부채는 대전시의 재정부담 초래
- + 수송효율이 전제되지 않은 지하철 2호선 건설은 대중교통시스템 붕괴로 이어짐
- + 타 지역 사례처럼 지하철 1호선 재정적자에 더해 심각한 운영적자 초래
- + 결국 사회복지 등 타분야에 대한 재정위축으로 이어져 삶의 질 저하 초래

이상.

토론

박정현(대전시의원)

민선 5기 대전광역시 복지분야 공약검토 결과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1. 서론

민선 5기 들어서 복지분야의 화두는 ‘보편적 복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이슈로 대두되었고, 실제 민선5기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직후 무상급식의 추진여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또한 민선 5기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의 위기’이다. 민선 4기의 과도한 개발 및 전시성 사업으로 인해 가용가능한 지방재원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인한 세원축소 및 세수감소로 인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도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민선 5기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임기 동안 60,835억원이, 이후 36,654억원 등 총 97,48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문별로 교통건설이 16,198억원, 도시개발이 14,648억원, 경제과학이 11,198억원인데 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지원, 복지, 환경녹지분야의 예산은 각각 5,131억원, 2,221억원, 6,854억원에 불과¹⁾한다. 특히 복지분야의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된 것을 볼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다.

2. 분야별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1) 영유아보(교)육, 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지원

민선 5기의 공약사업 중 특징지을 수 있는 하나는 보육과 관련하여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유아보육의 궁극적인 문제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보육인프라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아울러 8월 12일 열린 ‘민선 5기 보육정책 공청회’에서 밝힌 예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청회 자료	224억원	358억원	527억원	546억원
공약발표 자료	107억원	159억원	192억원	229억원

1) 분야별 예산은 민선 5기 임기 내의 예산을 반영한 것임.

공약발표 직전에 열린 공청회의 자료에 나타난 추진예산과 공약발표 자료집의 예산이 절반 이하인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공청회는 대전광역시 보육시설연합회가 개최한 자리였고,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규모로 참석하였다. 따라서 예산이 대폭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2) 첨단의료관광 도시 육성

대전의 의료시설이 여전히 편중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병원에 갈 때 여전히 병원의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 지역 중 병원이 밀집한 지역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대전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대전시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병원에만 집중되고 그 효과를 대전시민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3) 대전복지재단 설립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과 각 부문별로 많은 단체들이 있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민선5기의 대전시는 대전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복지공급 주체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복지재단보다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서 멀어지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재단의 업무 및 역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전발전연구원 및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보다 현재의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대전시가 감독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된다.

4)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

이민 민선 3기에서 추진했던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네트워크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선 4기에서 복지만두레는 공식적인 운영을 폐하고, 대신 무지개프로젝트가 기획, 추진되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민선 4기의 무지개프로젝트도 그 대상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현재의 대전상황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 5기의 민관협치의 복지프로그램은 복지만두레만 운영되고, 무지개프로젝트는 호지부지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무지개프로젝트와 복지만두레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대전시의 복지정책은 잔여적 복지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또한 투입되는 예산부터 여러 부문 간 비교할 때 가장 적은 단위로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선 5기 대전시가 복지분야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가 되지 않고, 복지분야의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나 일부 전문가의 협의가 아닌 전체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시 여성정책 공약이행 가능성을 통해 본 전망과 과제

임정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1. 들어가며

성평등 관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며, 여성정책 전담 부서의 범위를 넘어 모든 부처와 행정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구축된 성 주류화의 제도적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접근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성평등은 점차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역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분배 없이 더 이상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한국의 여성정책은 크게 3가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보호중심적 정책지향으로부터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중심적 정책지향으로의 전환이다. 두 번째는 특정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보편적, 일반적 차원에서의 젠더개념을 확산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은 동원지향적 성격을 갖는 과거의 여성정책과는 달리 여성의 참여를 내실 있는 질적인 성과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²⁾

민선5기를 이끄는 대전 시장은 한국의 여성정책의 흐름과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성주류화 추진 체계의 확립과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선5기 대전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 통계등과 관련된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사업들이 얼마만큼 민선5기에서 진행될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2. 민선5기 대전시 여성정책 공약

1) 공약실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

6.2지방선거에서 대전여성단체연합(준)은 여성의제를 제안하였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여성의제를 공약화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대전시장의 공약실행에 대한 실행위원회 구성, 참여, 내용, 최종보고회 등 일련의 과정에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려웠다.

2) 민선5기 대전시 여성정책 공약

(1) 여성이 행복한 세상-2014 프로젝트

2) 민선4기 1년, 대전시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민선4기 1년,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p42

-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 지역아동센터에 교사 지원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민, 관 협력체제 및 사회안전망 구축, ▪ 한부모, 조손 가정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아동양육 및 가사지원, 학습도우미 파견),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 여성가족연구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2)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한 제언

■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양산 우려

: 여성 역할 강조하는 취업강좌

: 대전시 전반의 여성고용 현황이 부재한 채 일자리 창출 정책 접근. 임시방편적 성격

■ 지역아동센터에 교사 지원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서 정책 구상 필요.

: 정부 정책을 수행, 전달하는 역할에 한정될 수도 있음

■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민, 관 협력체제 및 사회안전망 구축

: 기존 유사 조직체계가 있는 사업임.

■ 다문화여성 관련 정책

: 성별분리통계 필요

: 다문화 여성 정책의 재구조 및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과거 여성정책 수준의 지원 우려(시혜적 접근 위주)

■ 여성가족연구 전담기구 설치 운영

: 부설센터 내 단면적인 기능 확대 우려

: 독립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를 기반으로 한 여성가족연구 기구가 마련되어야 함.

▷ 대전 여성의 삶의 비전과 목표는? 통합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보임.

▷ 기존(민선4기) 여성정책과의 차별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그 지역의 여성들의 삶을 주목하고, 특성화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전 여성들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없음.

▷ 대전시의 성주류화 전략 실현 부재

아직 우리사회는 성평등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많이 마련되었지만 실제 시민의 삶의 수준과 의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대전시의 여성정책은 성평등 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하여 대대적인 브랜드화를 통해 정책의 지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4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가시적인 성과나 홍보성에 그칠 사업 보다는 정말 대전을 생각하고 정책을 마련한다면 대전여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내실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실제 성주류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선5기 대전시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다시 한 번 표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정책부서에서만 추진되는 여성정책을 넘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접목되어 대전시 전체를 성평등한 도시로 새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로 성주류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민선 5기 공약 환경부분 평가 및 제언

양홍모(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민선 5기 임홍철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사업, 10개 핵심사업과 8대 분야 54개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여전히 개발과 시설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환경녹지 부분은 54개 세부사업 중 총 4건(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3대 하천 살리기 사업, 자원순환단지 조성,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으로 전체 사업건수 대비 7.4% 전체 예산 대비 7.5%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3대하천살리기 사업 등 대부분 건설 사업이며 10대 중점 약속사업에도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1개 사업만이 포함되어 있고 임기 내 사업은 4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해당되어 환경공약의 문제와 부실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환경공약 세부 분석

1)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

민선4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나아진 부분들이 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양적인 측면에 치중했다면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생활공간 속 녹지공간 창출과 녹지벨트 구축 등 질적인 면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민선4기와 마찬가지로 도시 숲 보전 정책은 전혀 없다. 월평공원과 우성이산처럼 우수한 도시 숲은 보전하고 구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은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조성과 보전 균형이 필요하다.

2) 3대 하천 살리기 사업

3대 하천 살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보건설과 펌핑 시스템으로 인한 대전천 수질 문제, 대전MBC 앞 라버보로 인한 수질과 어도 기능성 문제, 갑천 하상 수영장 문제 등 대규모 시설로 인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갑천과 유등천의 금강살리기 사업도 문제가 되는 구간을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해야 한다. 유등천 뿌리공원 일대 침산여울(대형보) 설치, 안영교~사정교 자연형 하천구간 자전거도로 및 인공습지 조성 등은 환경오염과 하천 생태계 훼손 문제를 일으키고 대전시 3대하천복원사업 방향과 맞지 않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을 재검토 및 보완하겠다는 임홍철 시장의 공약이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적극 재검토 되어야 한다.

3) 자원순환단지 조성

음식물 및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기존 공공(21%)과 민간처리업체(79%) 위탁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은 78.5%(2007년 기준)이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입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 과잉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전용보일러 설치 사업은 민자 비율이 60%나 되고 사업 경제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4)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문제는 이전을 위한 용역과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기타 환경부분 공약 분석

교통건설관련 녹색교통 정책이 미흡하다. 도시철도 2호선은 노면전차(트램), BRT 등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자가용 수요 억제와 자전거 교통 및 보행권 확대 등 적극적인 녹색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현’은 공약대로 추진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직접 공급 시범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중앙로 재창조사업은 ‘대중교통물 계획’, 문화거리 조성 등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도심 재창조 계획이 필요하다.

도안 생태공원 조성은 서남부 스포츠 테마마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휴식과 레저공간 기능이 아니라 대전 최고의 도시숲(월평공원)과 자연하천(갑천)을 생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완충지로서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양 및 레저시설 등을 최대한 지양하고 대규모 면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민선 5기 환경관련 공약들은 민선 5기 5대 전략 목표 중 하나인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로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학교급식 무상급식 단계적 실현’과 같은 민선 4기와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공약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설 공급방식의 사업으로 개발과 시설화 사업들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와 악화되고 있는 도시환경 관련 대응 과제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후변화 대책은 에너지, 교통, 건축, 쓰레기, 농업, 지역경제, 환경, 생태계 등 모든 행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전혀 언급이 없고 석면피해와 아토피 및 천식 등 최근 시민들의 관심사인 보건환경 문제도 대책이 없다.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 장기적으로도 문제다. “임기 내 반딧

불이가 사는 대전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 실제 반딧불이가 도심 숲 월평공원에 살고 있다.

대전시 문화정책의 중심은 어디에

- 민선5기 문화정책 분야 토론문 -

조지영(대전문화연대)

민선 5기 대전의 비전을 살펴보니 “대전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와 자산 발굴, 육성”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어 발전시킨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지 않을까. 대전만의 가치와 자산을 발굴하여 활용한다면, 더구나 문화정책에서는 가장 적절한 정책기조가 될 듯 하다.

하지만, 문화정책에서 중심을 찾기 어렵다. 세계로 열린 대전이라는 기치에 걸맞는 듯 세계적인 축제와 세계적 수준의 예술육성이라는 정책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당연한 것 아닌가. 대전만의 색깔이 결국에 세계적인 그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일 것이다.

지난 4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문화단체협의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문화원연합회,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 대전충남민예총, 시네마테크대전,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희망의책대전본부)]에서는 시장 후보들에게 대전시 문화정책 의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대전시 문화정책에 관한 질의서

- ① 문화예산을 시 전체예산의 5%까지 확보
- ② 충남도청 부지를 문화생산복합공간으로 활용
- ③ 대전 동서지역간 문화환경 격차 해소
- ④ 대전의 축제들을 전체적으로 개선
- ⑤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 ⑥ 대전문화재단의 발전 방안
- ⑦ 영상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대전미디어센터 설립
- ⑧ 대전문화예술교육센터 설립
- ⑨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발굴, 활용에 대한 정책
- ⑩ 문화정책 기조와 대표공약

민선5기 대전시 문화정책을 살펴보니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현재 문화정책으로 설정되어 있다. 충남도청 부지 활용과 축제 계획, HD드라마 타운 건립 등 후보 시절과 달라진 내용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대전시 문화정책에서 중심으로 삼는 기조는 무엇인지 애매하다. 현존하는 문제들 위에 또 다시 문제의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전에는 축제가 공식적인 것으로만 20개가 훨씬 넘는다. 그 중에 같은 주제로 열리는 축제만 따져보아도 여러개(봄꽃축제 등)다.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정확한 개선방안은 없다. 대신 세계적인 축제를 대전에서 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전 국제 푸드 & 와인 페스티벌' 왠지 어색하다. '대전 국제 푸드 & 와인 페스티벌'에서 대전의 지역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과연 대전 시민들은 이 축제에 얼마만큼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문화관광부에서 높이 평가하는 축제인 보령 머드축제, 한산모시축제, 안성 바우덕이 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 대백제전 등 이름만 들어도 지역성과 내용이 쉽게 공감이 된다. 특히 그 지역민들에게는 축제 자체가 하나의 자부심이다. 하지만 '대전 국제 푸드 & 와인 페스티벌'에서는 대전 시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식상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또한 충남도청 부지 활용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체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것은 옛, 충남도청에 가면 다 있다인가. 충남도청 부지에 향토박물관, 대전종합예술회관, 대학교교양과정 야간 캠퍼스, 창작발표회장, 공연장 및 야외집회장, 상업적 부대시설, 테마잔디공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청 부지를 제대로 활용만 하면 일석삼조는 될 것이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원도심 활성화, 동서지역간 문화환경 격차 해소, 충남도청 부지 활용말이다. 충남도청 부지 활용 계획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만물상 계획이 아닌 정확한 중심 계획과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만한 역상성과 상징성이 당연히 있지 않은가.

대전의 지역 예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대전이 세계적 도시가 되고 최고의 드라마 타운이 생기는 것도 좋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더욱 좋겠다. HD드라마타운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영상문화복합공간으로의 미디어센터가, 해외 유명 도시와의 교류도 좋지만 지역민들이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축제와 시립예술단의 공연들, 인위적인 은행동,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LED조명캐노피보다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 문화 발전 방안 등이 절실하다.

세계적인 것의 바탕에는 대전스러움이 당연히 녹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전을 공감하고 대전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정책의 중심이 다시금 보여지기 바란다.